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의 기억과 과제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술회의 일정〉 2020. 12. 4.(금)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의 기억과 과제

	내 용
10:00 ~ 10:15	○ **개회사**: 조태영(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 **인사말**: 유기홍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 제1부 - 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소장)
10:20 ~ 11:20	1. 다나카 마사타카(센슈대학 교수): 일본의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 연구 및 과제 2. 김종수(1923시민연대 대표) : 1923년 간토학살사건과 시민운동 3.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내용 분석
	휴 식
11:30 ~ 12:30	- 제2부 - **종합토론** 사회 : 김광열(광운대 교수) 발표자 전원, 하종문(한신대 교수), 이경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성주현(숭실대 교수)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단에서는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지진과 화재 속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9월 1일에 즈음하여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연기되어 오늘에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의미 있는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관동대지진이라는 혼란 속에서 발생한 재일 한국인 학살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곧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계승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학살사건은 민족 대립과 차별에서 발생하였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움직임으로 반성의 모습이 희석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가해의 책임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했다는 점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 동안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관련 연구와 시민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과거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상호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하여 대립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 회복과 진전을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가 3년 후에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개최되도록 재단에 관심을 갖고서 축사를 하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멀리 일본에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다나카 마사타카 교수님, 김종수 대표님, 그리고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실 김광열 교수님, 하종문 교수님, 성주현 교수님, 이경미 연구위원 그리고 이 회의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가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조 태 영



C·O·N·T·E·N·T·S

1. 일본의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 연구 및 과제 ····· 1

다나카 마사타카(센슈대학 교수)

2. 1923년 간토학살사건과과 시민운동 ····· 23

김종수(1923시민연대 대표)

3. 일본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 ····· 35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의 관동대진재 조선인학살 연구 및 과제

다나카 마사타카 / 센슈대학 교수

일본에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 과제에 대해서

다나카 마사타카(센슈대학 교수)

1. 머리말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는 학살의 실태와 그 배경을 밝히는데 특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연구가 진전되고 있지만, 일본 사회나 정치에서의 배타적인 논조가 높아지면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희생자 관련 재일 동포라든가 추도·조사해 온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연구자들은 학문적 관심으로서 조선인학살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구와 배타적인 논조와의 관계성 및 영향을 의식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일본의 배타적인 풍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일본의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보고하도록 하겠다.

2. 조선인학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압력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학살이 일어난 이유로 첫째로 '불량 조선인이 습격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발생한 것이다. 유언비어는 일찍부터 발생하고 있어서 지진 재해 발생 직후인 오후 3시에는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에 의한 방화가 많다.'라는 유언비어가 있었던 것이 경시청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방화나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조선인이 붙잡혀 재판에 회부된 적은 없다. 그런데도 현재 일본에서는 이런 유언비어가 사실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거의 두 가지 문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주장 중 하나는 독립신문에 게재된 6천 명이라는 희생자 수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살해된 조선인은 일본 정부나 일본인에 대한 테러리스트나 이에 추종하는 자이며, 이를 죽이는 것은 '정당방어' ('과잉방어'라는 말도 사용된다)라는 주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주장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은 시민권을 얻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도쿄 도지사의 자세와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추도식에 대한 우익단체의 공격이다.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는, 1973년에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추모 행사가 이어져 왔으며 역대 도쿄 도지사들도 추도사를 보내왔다. 이 추모비는 일조(日朝)협회 도쿄도련이 사무국이고, 역사학회 계열의 단체가 운영하는 형태로 50주년 추도 행사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물로 서적이 출판되면서 건립되었다. 도쿄도지사와 도쿄도의회, 민간의 찬성과 기부로 건립된 비는 건립 후 도쿄도에 기증되었다.

그런데 2017년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9.1 관동대지진 조선인희생자 추도식전'에 추도사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같은 해 '소요가제'라는 우익단체가 '진실한 관동대지진 이시하라(石原)쵸 희생자 위령제'라는 집회를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최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바로 옆의 '다이쇼 대지진 화재 이시하라쵸 조난자비' 앞이다. 주최 측은 확성기를 통해 "지난 94년을 돌아보면 이 대지진으로 우리 조상이 6000명이나 되는 조선인 대학살을 자행했다는 허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그것을 이대로 방치해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공언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바로 옆에서 한 발언이다. 한편 이시하라초 희생자 위령제(이시하라초 희생자란 요코아미초 공원 인근 주민으로, 이 일대 화재 등으로 인해 많은 분이 사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초 희생자에 대한 추도의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목적이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방해를 목적으로 한 집회를 허가한 것은, 공원의 관리자인 도쿄도였다. 이후 고이케 도지사의 추도사 송부 거부와 소요가제의 집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9·1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소요가제'의 도발적인 행위에 휘말리지 말 것을 참가자들에게 요구했으나, 2019년에는 양측 참가자 간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를 허용하는 분위기는 약간 바뀌고 있다. 실행위원회가 2020년 추도식 개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도쿄도가 그들이 준비한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조건으로 공원에 대한 허가 신청을 수리하겠다고 통고한 것이다. 이 서약서에는 공원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중지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따를 것,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 이후의 공원 이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항목이 명기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지금까지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적은 없었고, 서약서는 소요가제 집회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요컨대 도쿄도의 요청은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과 소요가제 집회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소요가제는 자신들의 집회와 조선인 희생자 추도행사 양쪽 모두가 허락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겨냥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행위원회는 5월 18일자로 성명을 발표하고, 도쿄도의 요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또 자유법조단 도쿄지부가 5월 28일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이 6월 9일자로 성명을 내고, 지식인들도 6월 11일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에도 도쿄변호사회가 6월 22일자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도쿄도에는 항의의 목소리와 3만 명 이상의 서명도 전달되었다.

이러한 목소리에 밀린 도쿄도는 실행위원회에 대한 요청을 철회했다. 동시에 소요가제의 집회에서 시작된 '불령 재일조선인들에 의해서 가족이 살해당하고, 집이 불타고, 재물을 빼앗기고, 여성과 어린이가 강간당한 많은 일본인들' 등의 주장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되었다. 이는 시민들에 의한 고발의 성과이다.

3. 일본에서의 조선인학살, 중국인학살 연구의 흐름

서두에서 서술한 것처럼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는 진상 규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45년 이후 일본 내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노주은 연구자의 뛰어난 논고(論考)나 최근의 동향을 정리한 졸고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흐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조선인학살의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강덕상 선생님과 금병동 선생님은 1963년에 공동으로 정부 문서부터 신문 기사, 기억 등을 망라하여 수록한『현대사자료-관동대지진과 조선인』(미스즈서방, 1963년) 자료집을 편찬했다. 강덕상 선생님은 이후에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설서를 집필하고 조선인학살의 실태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금병동 선생님은 이후에도 자료집을 편찬하였는데, 같은 해에는 조선대학교 편『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과 실태』(1963년)를 출판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앞의 자료집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자료를 수록하고 또 부상을 당하면서도 가까스로 학살을 피한 체험자들의 상세한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두 자료집은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살에 대해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료집이다.

일본인의 연구는 40주년 전후를 계기로 진전됐다. 1963년에는『노동운동사연구』와『역사평론』등의 잡지에서도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에 대한 특집이 게재되었다. 이 같은 잡지 특집은 이후에도 50주년, 60주년, 70주년, 80주년, 90주년에 맞춰 구성되었다. 또한 70주년, 80주년, 85주년, 90주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회가 개최되어 그 성과가 출판되었다.

70주년 당시에는 자료집도 편찬되기 시작하여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 감수『관동대지진 정부 육해군 관계사료 ①정부·계엄령 관계사료, ②육군 관계사료, ③해군 관계사료』(1997년, 일본경제평론사)가 출판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조선인 체험자와 학살이 일어난 지역에서의 목격자 증언을 기록하는 활동도 1963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일조협회였다.

1963년에는 '일조협회 조선인 희생자 조사 위령 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후나바시(船橋)와 혼죠(本条)의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위령제도 거행되었다.

지진과 재해 50년에는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학살을 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서적이 간행되었다. 치바 현에서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1983년에 그 성과가 『이유 없이 살해당한 사람들』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도쿄 스미다구의 구 요쓰기바시 에서의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온 단체는 한국에서의 녹취 조사를 바탕으로 1992년 『바람아! 봉선화 노래를 실어 불어라』 라는 책을 간행했다. 이밖에 오충공 선생님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도 소중한 성과로 꼽힌다. 조선인 체험자의 귀중한 증언을 수록한 성과는 물론, 민족이라는 벽을 넘어 가해의 입장에 선 주민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만들기까지의 고충은 필자 등이 결코 알지 못하는 고생이 수반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고 덕분에 우리는 현재에도 이미 사망한 체험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1980~90년대에는 중국인학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다하라 히로시 『관동대지진과 왕희천사건-또 하나의 학살비사』(삼일서방, 1982년, 후에 신판 『관동대지진과 중국인-왕희천 사건을 추적한다』, (이와나미서점, 2014년), 니키 후미코 『관동대지진 중국인 대학살』(이와나미 서점, 1991년), 『지진 재해 하의 중국인학살』, (아오키서점, 1993년), 니키 후미코 연구자는 이마이 세이이치 선생님과 함께 중국인학살에 관한 사료집도 간행하였다. 지진과 재해 발생으로부터 90년이 되었던 지난 2013년에는 '관동대지진에서 학살된 중국인 근로자를 추모하는 모임'이 개최되었고 이후 매년 중국에서 유족을 초청해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4. 맺음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필자는 현재 2003년에 관동대지진 80주년 기념회를 위해서 김광열 교수에게 보고를 의뢰하였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비하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필자의 능력의 한계와 지면 상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간단히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조선인학살에 대해서는 군대의 조선인 탄압 경험과 군대에 의한 학살의 상관 관계에 대해 검토한 것, 희생자 동포가 사건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진 직후 조선인의 고향으로의 귀환에서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검토한 것, 해방 후에 동포들이 '학살의 기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연구도 있다. 이 외에 민중들이 왜 조선인학살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 그 논리를 찾으려는 연구도 있다.

일본인 학살에 대한 논고도 나와 있다. 이전의 연구는 가메이도사건이나 오스기사건 등의 노동운동이나 정치사상에 대한 탄압에 대한 것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지방 출신자(후쿠다무라 사건)나 장애인(장애인을 살해한 사건)등 보다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해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시민운동에 의한 진상규명, 한국에서의 역사교육 분석, 한국 측에서 본 일본의 역사연구 정리와 역사교과서 분석, 『독립신문』 등 민족운동 세력의 논조 분석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인학살에 대해서는 학살 실태에 대한 논고, 당시 베이징 정부의 조사 자료 분석,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유족에 대한 녹취 등 다양한 진상 규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일본에 없었던 것으로 매우 귀중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향후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본인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기고, 상처받은 피해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희생자를 야기한 각각의 학살에 대해 상호 보고함으로써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차이점으로는 예를 들면, 중국인학살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조선인학살은 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인희생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름과 출생지가 밝혀진 반면 조선인희생자의 이름은 대부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각 민족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희생자에 대한 조사도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조선인 희생자에 대해 조사한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한층 더 조사의 진전을 기대한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한국이나 재일동포, 중국의 유족을 초청해 대화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연구가 다양해지는 한편, 학살 실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언비어는 관헌, 각종 통신 수단, 사람을 매개로 확산돼 지방신문 등에까지 실렸는데, 그런 정보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었는지, 현재의 연구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만 추적하고 있을 뿐이다. 학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는 없다. 기초적인 작업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기술해 왔는데,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말」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다. 전술한 '6천명'이라고 하는 희생자 수에 대해서, 야마다 쇼지는 이를 검증하는 것은 이제 관란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학살을 정당화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희생자 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정확한 희생자 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피해 실태를 알고 사망한 희생자 개개인에 대해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0명'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고의로 희생자 수를 적게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가해의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수렴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심이 희생자 개개인에게 쏠려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당초 희생자 수가 분명치 않은 것은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태만에 의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방해를 받으면서 희생자 조사를 한 동포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일본의 개설서나 교과서에서 대부분 관용구처럼 쓰이는 '혼란 속에서 살해당했다'는 표현도 애매모호하다. 그 '혼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 혼란스러웠는지, 어느 곳이 어떤 이유로 혼란스럽게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서두에 기술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배타적인 논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둘러싼 기술이나 주장에 쓰이는 말이 지닌 의미를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日本における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の課題について

田中正敬(專修大學 教授)

１．はじめに

従来の日本における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研究は、何よりも虐殺の実態とその背景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主眼が置かれてきた。後述するように、研究自体は進展している一方で、日本の社会や政治における排外的な論調が高まり、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犠牲者同胞や、追悼・調査してきた人びとに対する攻撃が公然と行なわれつつあるのが現状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の研究者は学問的関心として朝鮮人虐殺について調べることにとどまらず、自身の研究と排外的な論調との関係性や影響を意識しつつ研究を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本稿はそうした観点から、現在の日本の排外的な風潮についてにも言及した上で、日本の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の成果と課題について報告するものである。

２．朝鮮人虐殺に対する社会的・政治的な圧力

関東大震災時に日本で朝鮮人虐殺が起こった理由として第一に挙げられるのは、「不逞な朝鮮人が来襲する」などの流言が発生したことである。流言は早くから起こっており、震災発生直後の午後3時には「社会主義者と朝鮮人による放火が多い」との流言があったことが警視庁の文書にも記録されている[()]。しかし、放火や暴動を働いたとして朝鮮人が捕まり裁判にかかったことはない。実際にはそうしたことは起こら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現在の日本ではこのような流言が「事実」として宣伝されている。こうしたことを主張する団体・個人はほぼ、二つのフレーズを

繰り返しているに過ぎない。

その主張の一つは、『独立新聞』に掲載された6千人という犠牲者数が誇張だということである。もう一つは、殺された朝鮮人は日本の政府や日本人に対するテロリストかそれに従った者であり、これを殺すのは「正当防衛」(「過剰防衛」という言葉も使われる)であるという主張である。前述したようにこれらの主張には何ら根拠はない()。

にもかかわらず、こうした主張は市民権を得ている。それを象徴しているのが、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に追悼辞を寄せないという決定をした東京都知事の姿勢と、横網町公園で開催されている追悼式典に対する右翼団体の攻撃である。

東京都墨田区横網町公園の「追悼　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碑の前では、1973年の建立以後現在に至るまで追悼行事が続けられ、歴代の東京都知事も追悼辞を寄せてきた。この碑は、日朝協会東京都連が事務局となり、歴史学会系の団体が運営する形で、50周年の追悼行事や調査が行なわれ、またその成果として書籍が刊行されるなかで建立されたものである()。東京都知事や東京都議会、民間の賛同と寄付を得て建立された碑は、建立後に東京都に寄贈された。

ところが、2017年、小池百合子東京都知事は「９．１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に追悼辞を送ることを拒否した()。

同年、「そよ風」という右翼団体が「真実の関東大震災石原町犠牲者慰霊祭」という集会を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と同日同時刻に開催した。朝鮮人犠牲者追悼碑のすぐ近くの「大正大震火災　　石原町遭難者碑」の前である。主催者は拡声器で「この94年を省みると、この大震災で、私達の父祖が、6000名もの朝鮮人を大虐殺をしたという虚偽があたかも事実であるかのように認識されつつあり、それをそのまま放置してきた事は、誠に慙愧の念に堪えません」と公言した。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のすぐ脇での発言である。一方、「石原町犠牲者慰霊祭」(石原町犠牲者とは横網町公園近隣の住民で、この一帯の火災旋風等により多くの方が亡くなった)とうた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石原町犠牲者に対する追悼の言葉はほとんどなかった。彼らの目的が、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の妨害に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そして、この妨害を目的とした集会を許可したのは、公園の管理者である東京都であった。以後、

小池都知事の追悼辞送付の拒否とそよ風の集会は、現在まで続いている。

「９．１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の実行委員会はそよ風の挑発的な行為に乗らないように参加者に求めていたが、2019年には双方の参加者同士が小競り合いをする場面もあったという。

だが、最近になってこうしたヘイトスピーチを許容するような空気は若干変わりつつある。それは、実行委員会が2020年の追悼式典開催を申請したことに対して東京都が、彼らが用意した誓約書に署名するよう要請し、これを条件に公園の許可申請を受理すると通告したことに端を発したものである。誓約書には、公園管理に支障となる行為を行なわないこと、中止を指示した場合には従うこと、指示に従わない場合には次年度以降の公園利用が使用許可されない場合があることを了承することなどの項目が並べられていた。

しかし、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がこれまで「支障となる行為」を行なったことはなく、誓約書はそよ風の集会に対する規制を目的と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ものであった。要するに、東京都の要請は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とそよ風の集会を同列に扱い、これを一律に規制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そよ風は、彼らの集会と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双方が許可されなくなることを狙っているという分析もある()。

実行委員会は5月18日付で声明を発表し、東京都の要請を撤回するよう求めた()。また、自由法曹団東京支部が5月28日に()、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国家責任を問う会が6月9日付で声明を出し()、知識人有志も6月11日付で声明を発表した()。その後も、東京弁護士会が6月22日付で声明()を発表した。この他、東京都には抗議の声や3万筆以上の署名も寄せられた。

こうした声に押された東京都は実行委員会への要請を撤回した()。同時にそよ風の集会で発せられた「不逞在日朝鮮人たちによって身内を殺され、家を焼かれ、財物を奪われ、女子供を強姦された多くの日本人たち」などのスピーチが、ヘイト・スピーチとして認定された()。これは市民による告発の成果だと思われる。

３．日本における朝鮮人虐殺、中国人虐殺研究の流れ

冒頭で記したように、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は真相究明を中心に進められてきた。

1945年以降の日本における在日韓国人と日本人による研究の流れについては、ノ・ジュウン氏の優れた論考()や近年の動向を纏めた拙稿()があるので、ここでは最低限の流れを確認する。

朝鮮人虐殺の真相究明をリードした姜徳相氏と琴秉洞氏は、1963年、共同で政府内の文書から新聞記事、回想に至るまで網羅的に収録した資料集『現代史資料6ー関東大震災と朝鮮人』(みすず書房、1963年)を編纂した。姜徳相氏はその後も研究を進めると同時に概説書も執筆し、朝鮮人虐殺の実態を社会に広く知らせる役割も果たした()。琴秉洞氏は、その後も資料集を編纂していく()。もう一つ、同じ年には朝鮮大学校編『関東大震災における朝鮮人虐殺の真相と実態』(1963年)が出版された。この資料集には上記の資料集のような基本的な資料とともに、傷害を受けながらも虐殺をかろうじて免れた体験者の証言が詳細に収録されているという特徴がある。この二つの資料集は、60年近く経った現在でも、虐殺について研究しようとする人が必ず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的な資料集である。

日本人の研究は40周年前後を契機に進展した。1963年には『労働運動史研究』や『歴史評論』などの雑誌でも関東大震災時の虐殺についての特集が組まれた。このような雑誌の特集は、その後も50周年、60周年、70周年、80周年、90周年と周年ごとに組まれていくことになる。また、70周年、80周年、85周年、90周年にはそれぞれ比較的規模の大きな研究集会が開催され、その成果が出版された()。

70周年の際には資料集の編纂も始まり、松尾章一監修『関東大震災政府陸海軍関係史料1～3』(1：政府・戒厳令関係史料、2：陸軍関係史料、3：海軍関係史料、日本経済評論社、1997年)も刊行された。

上述した朝鮮人体験者や虐殺が起こった地域の目撃者の証言を記録する活動も、1963年前後から本格的に進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を主導したのは日朝協会だった。1963年には「日朝協会朝鮮人犠牲者調査慰霊特別委員会」が発足、船橋と本

庄の現地調査が行なわれ、慰霊祭も執り行なわれた。

震災50周年には東京と埼玉での虐殺を目撃した人びとに取材した書籍が刊行された()。千葉県でも1970年代から調査が本格化し、1983年に出版された『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にその成果が纏められた ()。東京墨田区の旧四ツ木橋での虐殺事件の調査をしてきた団体は、韓国での聞き取り調査もふまえ、1992年、『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という本を刊行した()。この他、呉充功氏による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製作も貴重な成果として挙げられる。朝鮮人体験者の貴重な証言を収録した成果はもちろんのこと、民族の壁を越えて加害の立場に立つ住民の証言を映像化するまでの苦労は、筆者などにはとても知ることができない厳しいものであったと思う。そのおかげで、私どもは現在でも既に亡くなった体験者の生々しい証言を聞く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1980年代から90年代にかけては中国人虐殺についての研究も進んだ。田原洋『関東大震災と王希天事件ーもうひとつの虐殺秘史』(三一書房、1982年、後に新版『関東大震災と中国人ー王希天事件を追跡する』岩波書店、2014年)、仁木ふみ子『関東大震災　中国人大虐殺』(岩波書店、1991年)、『震災下の中国人虐殺』(青木書店、1993年)、仁木ふみ子氏は今井清一氏とともに中国人虐殺にかんする史料集も刊行した()。震災から90年目の2013年には、「関東大震災で虐殺された中国人労働者を追悼する集い」が開催され、以後毎年、中国から遺族を招いて追悼行事を行なっている。

４．おわりに―研究の現状と課題

筆者はいま、2003年に関東大震災80周年記念集会で金廣烈氏に報告を依頼したことを思い出している()。当時に比べると韓国でも日本でも新しい問題関心にもとづく研究が続々と登場している。筆者の能力の限界と紙幅から日本の研究を中心にして、簡単に研究動向を紹介して筆者が考える課題を提示したい。

朝鮮人虐殺については、軍隊の朝鮮人弾圧経験と軍隊による虐殺の相関関係について検討したもの()、犠牲者同胞が事件をどのように捉えたかという点について、震

災直後の朝鮮人の故郷へ向けての帰還から植民地権力への抵抗の姿を見ようとするもの()、解放後に同胞が「虐殺の記憶」をいかに考えたかという研究もある()。この他、民衆がなぜ積極的に朝鮮人を虐殺しようとしたのか、その論理を探ろうとする研究もある()。

日本人虐殺についての論考も出されている。以前の研究は、亀戸事件や大杉事件などの労働運動や政治思想に対する弾圧についてのものが多かったが、近年は地方出身者（福田村事件）や障がい者（ろう者を殺害した事件）などより多様な研究が出てきている()。

韓国では東北亜歴史財団でのシンポジウムをもとにして、『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も出版された()。同書には、市民運動における真相究明、韓国における歴史教育の分析、韓国側から見た日本の歴史研究の整理や歴史教科書の分析、『独立新聞』など民族運動における論調の分析などが収録されている。また、中国人虐殺については、虐殺の実態についての論考、当時の北京政府の調査資料の分析、亡くなった中国人労働者の遺族への聞き取りなど、多様な真相究明の成果が出てきている()。こうした研究はこれまでの日本にはなかったものであり、大変貴重なものだと思う。

次に今後の課題について述べたい。韓国や中国では韓中日三ヶ国の研究者を集めてシンポジウムが行なわれるようにもなっている()。同じ時に同じ場所で、同じく日本人によって命を奪われ、傷つけられた被害の全体像を捉える研究がこれまで行なわれてこなかったことからすると、大きく前進するものだと言える。こうした機会を設けて、朝鮮人と中国人、日本人犠牲者を生んだそれぞれの虐殺について報告しあうことによって、共通点や相違点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相違点としては、たとえば、中国人虐殺が比較的狭い地域で集中的に起きているのに対し、朝鮮人虐殺はより広範囲に長期間に亘って起こっ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また、中国人犠牲者については多くの名前や故郷
が判明しているのに対して、朝鮮人犠牲者の名前はほとんど知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ことから、それぞれの民族が当時置かれた状況や意味を考えることもできよう。それは、当然、日本の植民地支配の意味を考えることにつながるであろう。

犠牲者についての調査もまだ充分とはいえない。残念ながら日本では、これまで

日本政府が朝鮮人犠牲者について調査した史料は発見されていない。韓国や中国におけるいっそうの調査の進展に期待したい。また、これまでに明らかになった韓国や在日同胞、中国の遺族をお招きして話を伺う機会が必要ではないかとも考えている。

研究が多様になる一方で、虐殺の実態に直接関わる研究は進んでいない。流言は、官憲、さまざまな通信手段、人を媒介にして拡がり地方の新聞などにまで掲載されたが、そうした情報はいつ、どのようなルートを通じて拡散したのか、現在の研究はその代表的・象徴的な事例しか追えていない。虐殺についても、具体的にどこで起こったのかについて網羅的に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研究はない。基礎的な作業がまだまだ不足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

最後に、これまで何度か書いてきたことではあるが、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語る上での「言葉」について言及しておきたい。前述の「6千人」という犠牲者数について、山田昭次氏はもはやこれを検証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述べている()。虐殺を正当化し否定しようとする人びとはそうした現状を知りつつ、犠牲者数が正確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

筆者も正確な犠牲者数を知ることは重要であると考えるが、それは被害の実態を知り、亡くなった犠牲者のひとりひとりについてできるかぎり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からである。ところが、「6千人」を問題とする人びとは、故意に犠牲者数を少なく見せようとするために数字を問題にしているに過ぎない。このような主張は、加害の問題を単純に数の問題に収斂させるものであり、彼らの関心が犠牲者一人一人に向けられてい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そもそも犠牲者数が判然としないのは、日本政府の意図的な怠慢によるものである。その責任を問うべきは、妨害を受けながら犠牲者の調査を行なった同胞ではなく、日本政府である。

日本の概説書や教科書の多くに慣用句のように使われる「混乱のなかで殺された」という表現も、あいまいである。「混乱」とは具体的に何か、誰が混乱しているのか、どこがどのような理由で混乱することになったのかが全く不明である。

冒頭に記したように、日本では排外的な論調が高まっている。そうしたなかでとりわけ日本においては、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る記述や主張に用いられる言葉の持つ意味を注意深く読み取り、また使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

(1) 警視庁編『大正大震火災誌』（1925年）。
(2) 加藤直樹『「朝鮮人虐殺」をなかったことにしたい人たち』（ころから、2019年）。
(3) 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行事実行委員会編『歴史の真実―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現代史出版会、1975年）。
(4) 拙稿「小池都知事の追悼辞送付取りやめとは何か―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めぐって」（『歴史学研究』968、2018年）。
(5) 詳しくは、安田浩一「朝鮮人犠牲者追悼のウラで行われた「虐殺を否定する」慰霊祭―なぜ死者は冒涜され続けるのか」（https://gendai.ismedia.jp/articles/-/67331）を参照。
(6) 加藤直樹「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をめぐって何が起きているのか」（【特別寄稿】都知事選討論会でヘイトスピーチ禁止条例制定を明確に拒否した小池百合子都知事！　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加藤直樹氏が暴く草の根右翼ネットワークと小池都知事ら極右政治家による歴史修正の策動！
2020.7.3、https://iwj.co.jp/wj/open/archives/477392。
(7) ９.１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実行委員会「声明」。以下のサイトには、声明を出した後の経過や2020年9月1日にインターネット上で開催予定の追悼行事の案内も掲載されている（https://sites.google.com/site/japankoreatokyo/911）。
(8) 自由法曹団東京支部「９・１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の開催につき不当な誓約書の提出を条件とすることを撤回し、占有許可を求める声明」http://www.jlaf-tokyo.jp/shibu_katsudo/seimei/2020/200528.html）。
(9)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国家責任を問う会【声明】「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に対する誓約書提出要求の撤回を求めます」（https://www.shinsai-toukai.com/top-japanese-%E6%97%A5%E6%9C%AC%E8%AA%9E/%E5%A3%B0%E6%98%8E-%E8%AB%8B%E9%A1%98-%E6%B1%BA%E8%AD%B0%E7%AD%89/）。
(10) 「東京都に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への「誓約書」要請の再考と横網町公園の趣旨に反する集会への対処を求める」（声明取り纏めは加藤直樹、https://iwj.co.jp/wj/open/archives/398345）。
(11) 東京弁護士会「９．１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のための公園占用許可につき不当な誓約書の提出を条件とすることの撤回を求める会長声明」（https://www.toben.or.jp/message/seimei/post-584.html）。

(12) 9.1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実行委員会　実行委員長　宮川泰彦「今年の追悼式典の一般参加中止（ネット中継）についてのご報告」中に、東京都が誓約書の提出を求めない旨を明言したとの記述がある（https://blog.goo.ne.jp/nicchokyokai-honbu/e/b68c57e9a26b68764b6423ed52878a19?fbclid=IwAR3-rfVi63NCBKjEfEJ1gMfOFWQF5Y3cs0q4Hu0aG_1mseGrmCPNwN77-bE）。東京都の方針撤回については、ハンギョレ新聞「東京都、関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追悼式典に対する誓約書要求を撤回」（https://news.yahoo.co.jp/articles/c2341812a8c980ec396424c956435fb5e43991b3）などで報道された。

(13) 東京都総務局「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第1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く表現活動の概要等の公表について」（8月3日）で、東京都の対応として発表した。そよ風の集会のスピーチが「これらの表現は、不逞朝鮮人という言葉を用いながら、本邦外出身者を著しく侮蔑し、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目的を持っ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また、当該発言がなされた日時、場所、その他の態様等に照らせば、別の集会に対して挑発的意図をもって発せられたものであって、その表現内容も朝鮮人を貶め、傷つける差別的表現であることから、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に該当すると認められる」と認定されたのである。ただし、そよ風に対する具体的な規制などの方針は示されていない（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20/08/03/12.html?fbclid=IwAR3XTQWJ7aE5KtnvUZvVBkC6aUVcHjczm0wWyk8CXnUR8Da8rBzVG4WYe4M）。

(14) ノ・ジュウン「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研究の二つの流れについて―アカデミックなアプローチと運動的アプローチ」（前掲、『地域に学ぶ関東大震災』所収）。他に、松尾章一「関東大震災の歴史研究の成果と課題」（『多摩論集』9号、法政大学、1993年）も参考になる。

(15) 最近の研究動向については、拙稿「近年の関東大震災史研究の動向と課題―現在までの十年間を対象に」（関東大震災8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編『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 アジア・国家・民衆』日本経済評論社、2004年）、「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をめぐる論点」（歴史地理教育』809号、2013年）、同「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48、2015年）を参照。

(16) 姜徳相『関東大震災』（中公新書、1975年）。後に『関東大震災―虐殺の記憶』（青丘文化社、2003年）として、新版を執筆。

(17) 琴秉洞編・解説『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関係史料』1～4巻、緑蔭書房（1：朝鮮人虐殺関連児童証言史料、1989年、2：朝鮮人虐殺関連官庁史料、1991年、3：朝鮮人虐殺に関する知識人の反応、1996年、4：朝鮮人虐殺に関する植民地朝鮮の反応、1996年）から刊行された。同シリーズには、他に山田昭次編・解説『5　朝鮮人虐殺関連新聞報道史料1～4、別巻』（2004年）がある。

(18) 関東大震災7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編『この歴史永遠に忘れず―関東大震災七〇周年記念集会の記録』（日本経済評論社、1994年）、前掲『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関東大震災85周年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編『震災・戒厳令・虐殺　関東大震災85周年朝鮮人犠牲者追悼シンポジウム―事件の真相糾明と被害者の名誉回復を求めて』（三一書房、2008年）、関東大震災90周年記念行事実行委員会編『関東大震災　記憶の継承―歴史・地域・運動から現在を問う』（日本経済評論社、2014年）。

(19) 日朝協会豊島支部『民族の棘―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の記録』（1973年）、関東大震災五十周年朝鮮人犠牲者調査・追悼事業実行委員会(日朝協会埼玉県連合会内)『かくされていた歴史―関東大震災と埼玉の朝鮮人虐殺事件』（1974年、1987年に増補改訂版を発行）。

(20) 千葉県における関東大震災と朝鮮人犠牲者追悼・調査実行委員会『いわれなく殺された人びと―関東大震災と朝鮮人』（青木書店、1983年）を参照。

(21) 関東大震災時に虐殺された朝鮮人の遺骨を発掘し追悼する会編『風よ鳳仙花の歌をはこべ―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から70年』（教育史料出版会、1992年）を参照。

(22) 今井清一監修、仁木ふみ子編『史料集　関東大震災下の中国人虐殺事件』（明石書店、2008年）。

(23) 金廣烈「韓国における在日朝鮮人と朝鮮人虐殺事件の研究状況」（前掲『世界史としての関東大震災』）。

(24) 愼蒼宇「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朝鮮人虐殺―義兵戦争・シベリア戦争・3・1独立運動から関東大震災へ」（朝鮮大学校朝鮮問題研究センター編『記録集　関東大震災95周年朝鮮人虐殺犠牲者追悼シンポジウム―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大虐殺と植民地支配責任』2019年）。

(25) 西村直登「関東大震災下における朝鮮人の帰還」（『社会科学』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47-1、2017年）。

(26) 鄭栄桓「解放直後の在日朝鮮人運動と「関東大虐殺」問題―震災追悼行事の検討を中心に」（前掲、『関東大震災　記憶の継承』所収）、および鄭永寿「「関東代虐殺事件」と植民地支配責任追及―解放直後在日朝鮮人運動の実践」（前掲、『記録集　関東大震災95周年朝鮮人虐殺犠牲者追悼シンポジウム』所収）。

(27) 藤野裕子『都市と暴動の民衆史―東京・1905-1923年』（有志舎、2015年）。

(28) 辻野弥生『福田村事件―関東大震災　知られざる悲劇』（崙書房、2013年）、小薗崇明「関東大震災下に「誤殺」されたろう者について」（前掲『関東大震災記憶の継承』日本経済評論社、2014年）を参照。

(29) 강덕상 야마다 쇼지 장세윤 서종진 외『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동북아역사재단、2013年、その後日本で翻訳版『関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論創社、2016年）を発行。

(30) 宮川英一「関東大震災下における朝鮮人の帰還」（『多维视角下的东亚近代史研究国际学术研讨会　论文集』（主办单位：宁波大学外国语学院・宁波大学外国语学院翻译研究院、2019年）。

(31) その成果は한일민족문제학회·독립기념관『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집: 해방후 일본 관동대지진 한·중 양국인 학살에 대한진상규명활동과 그 전망』(2018년)、および前掲『多维视角下的东亚近代史研究国际学术研讨会　论文集』参照。

(32) 山田昭次『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 －そ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創史社、2003年) 。

1923년
간토학살사건과과 시민운동

김 종 수 / 1923시민연대 대표

1923년 関東학살사건과 시민운동

- 사건발생 100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김 종 수(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Ⅰ. 문제의식

"1923 간토(関東)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23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1923 간토(関東)학살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인들은 '재동경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결성하여 앞으로는 구호를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조선인 학살의 배경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활동은 일본 국가와 민중의 조직적인 감시와 은폐로 인해 제약을 받았지만, 학살의 원인으로서 '유언비어'의 생성과 유포를 지목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위문반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 법적 보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벌여나갔다.

사건발생 84년이 되던 2007년, 한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1] 학살사건을 조사하고 추모하는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꾸준하게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행동들은 지속해 오고 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도 간토학살사건에 대해 일본의 국가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의 배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이즈미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우익정치인들과 '재일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나 '넷우익'과 같은 혐한단체들은 간토학살피해자를 추모하는 일을 방해하며, 도쿄도지사 고이케유리코는

1) 이 추모행사는 2007년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 아힘나운동본부, 일본NPO법인 Asia House가 공동주최하고, 유기홍의원실이 주관하였으며,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이 후원하였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2007년 11월 도쿄에서 [간토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를 조직하고, 2009년에 한국의 실무단체로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를 두고, 2010년에 일본에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행정조치등을 통해 추도행사를 '헤이트스피치'와 같은 격으로 보면서 준법서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는 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문제로 인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해 겉으로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2013년에 발견된 명부의 유족을 찾는 일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하거나, 추도사를 발표하거나, 추도행사를 하지 않는 등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은 지속되고 있다.

1923 간토(関東)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23년에는 적어도 한국정부가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학살피해자추모행사를 주최하고,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학살피해자의 유족을 찾고, 일본 현지에 있는 간토학살피해자의 유해의 일부라도 가져와 추모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설전시와 역사교육을 민관협력으로 실시하기를 바라며 다시금 100년을 맞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실천과제들을 생각해 보자.

Ⅱ. 한국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100년 향한 실천계획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를 중심으로

1. 2013년,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실천과제 진척상황에 대하여

1) 2013년의 향후 과제 목록

* 간토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
*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을 찾는 일
* 일본 정부에 국가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
* 일본에 있는 간토 관련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번역·출판 하는 일
* 전 세계인이 간토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
* 한일 민간단체가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간토역사 부교재를 제작해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일

* 한일 역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연수를 실시하는 일
* 정기적인 스터디투어를 실시하는 일
* 간토 조선인학살사건을 연구하는 연구생을 지원하는 일
* 위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을 늘려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확대해가는 일

2) 2020년까지의 진척상황과 활동목표의 수정

* 19대 국회에 유기홍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103명의 공동발의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본 회의 상정이 무산됨 --〉 21대 국회에 다시 유기홍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특별법 발의를 요청 (수정된 특별법 초안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요청)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교육부) 기억과평화 설립 (2018)
  역사관 운영, 연구소 운영, 1923다크투어, 다양한 1923교육콘텐츠개발을 위한 법인 조직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법인 설립
*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건립 (2019~2023)
  (재)아우내, 주민신용협동조합, 아힘나평화학교가 주축이 되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2020. 5월 ~ 8월)하였고, 2020년 10월 12일 완공기념 개관식 예정
* 〈1923인문학연구소〉 개소 (2020)
  〈법인 기억과평화〉 부설로 역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연구자들과 간토학살사건을 연구하고,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10월 12일 개소식을 하고 기념 심포지움을 열기로 함.
* 〈법인 기억과평화〉 부설 출판사 〈기억의 서가〉를 통해
  - 동화 엿장수 구학영 그림책 출판 작업진행 (2020. 10. 출판예정)
  -『大正の朝鮮人虐殺事件』北沢 文武著, 조현제 역 (출판예정)
* 웹신문 미디어 기평 www.1923news.com 운영 (2017년 ~)
* 1923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작업 진행 (2020. 11월 공개 예정)

2. 간토학살사건 100주기 추도사업의 주요 실천과제와 추진주체

분야	주요 실천 과제	실무추진단체
대외 협력	간토학살진상조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단 제안*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한, 중, 일 학살피해자 유족 네트워크	
	간토학살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간토학살피해자 100주기 추도행사 준비위원회 구성	
	유엔인권이사회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1923코리안제노사이드의 사과, 배보상 요청*	
연구	국내외 간토학살사료해제 및 DB구축*	1923인문학연구소
	1세대 연구자 및 조사활동가 구술조사*	
	각 지역에서의 학살사건 및 조사활동 주요 출판물 번역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	
역사 교육	1923간토학살 주요지역 상설전시관 완공 (2023까지) *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군마지역 협력망 구축)	기억과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차별과 배제의 역사, 在日코리안 인권문제 기획전시	
	국가폭력에 의한 민주화의 역사 기획전시	
	상설교육 -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	
	1923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한,일,영 3개국 언어) *	
기획	역사관 운영지원을 위한 기금모금사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
	1923 간토순례여행 (1923 Kantou Dark Tourism)	
	영화, 연극,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역사교육 콘텐츠개발	
출판	연구, 창작, 번역물 출판	법인 기평 부설 〈기억의 書家〉
	인터넷 신문 미디어기평 운영	
기타		

1) 대외협력 실천과제에 대하여

* “간토학살진상조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단구성”에 대한 논의는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의 이일만사무국장과 일본의 추도식에서 만날 때마다 좋은 날의 약속으로 희망해 왔으나 남북상황의 급변과 2018년 1월 이일만사무국장의 별세로 인해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2023년이면 북과 남, 미국과 일본의 지도체제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실무단에서 꾸준하게 준비해 나갈 사안이다.
* 1923간토학살사건을 ‘1923간토코리안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세계 제노사이드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마에다아키라 박사의 추진에 한국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2023년 이전에 한일중 유족들과 함께 유엔방문추진단을 구성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실천과제에 대하여

* 국내외 간토학살사료들을 모아 해제하고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원본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간토학살 1세대 연구자와 조사활동가들 대부분이 70대 후반과 80대의 고령이므로 생존해 계신 동안에 개인사를 인터뷰 영상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대부분 자서전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중요하게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문헌 연구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역사교육 -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1923간토학살사건을 주제로 한 역사관은 사건발생 100년이 되도록 건립되지 못했다. 요코아미쵸공원에 세워진 추도비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도식마저 허가받고 하라고 하는 현 일본의 정치상황 속에서 간토학살전시관 건립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좋은 모양새일 수 있으나,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까지 기다리기에는 2023년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고, 또한 정부가 세운 역사관은 집권세력이 자주 바뀌는 상황 속에서 내용의 변경요구와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에서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민간차원의 역사관 건립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고,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단체(아힘나평화학교, (재)아우내, 주민신용협동조합)들의 대승적인 결의로 6억에 가까운 건물 리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비어있는 전시관에 각 지역 학살사건의 진실을 보여줄 콘텐츠 구성과 전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공동협력으로 추진될 것이며, 실무와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 기억과평화에서 맡기로 하였다.

*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역사관에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난 당시의 사건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추도활동들을 상설로 전시할 것이며, 차별과 배제로 이어져 온 재일 코리안의 인권문제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들에 대해서도 기획전시할 것이다.
* 1923역사관이 있는 『아우내 쉼플스테이』는 2만 2천평의 산중에 위치해 있고, 5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까페와 야외공연장, 운동장, 풋살장 등이 있어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인권, 평화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우내를 둘러싼 지역에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을 완성한 동면의 역사이야기, 동학농민의 치열한 격전지 세성산 전투이야기, 아우내만세운동의 숨은 주역 김구응 열사가 민족교육을 실시했던 진명학교이야기, 유관순의 상징화와 조병옥 이야기,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람까지 한일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 1923역사관과 함께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2023년까지 새로운 자료를 탑재하고 꾸준히 보완하여 2023년까지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로 볼 수 있도록 해갈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은 일반적으로 민간차원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향후 역사관의 사료를 구하는 일, 막대한 사료를 번역하고 DB화하는 일, 콘텐츠를 구성하고 전시하는 일, 상성운영하는 일 등은 향 후 정부와 자치단체 등 민관협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Ⅲ. 간토학살 연구의 100년 과제에 대한 제언

1. 사건명에 대한 정리

1923년 関東대지진 당시 조선인, 중국인, 일본 반체제활동가들이 학살된 사건에 대한 학술적 사건명이 100년을 앞두고 일치해야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関東'지역을 계속 한국식으로 '관동'이라 읽고 쓰는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関東학살사건'을 '관동대지진'으로 축약하여 사용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100년'이라는 시기성을 고려한 연구의 활성화 기대

한 사건이 100년을 맞는다면 비록 대중적인 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토학살사건백서'가 출판되어야 한다. 앞서 간토학살사건의 연구동향과 과제에 대한 발표(성주현)가 있었는데, 100년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매우 빈약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지나고서 해방된 대한민국에서조차 '関東학살사건'에 대한 연구가 왜 이처럼 빈약했을까하는 연구도 필요한 만큼 그 이유가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100년을 앞 둔 현 시점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빈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100년을 맞는 시기성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연구의 줄기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를 제안해 본다.

- ▶ '関東학살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엄령'이 '風說(유언비어,거짓뉴스)'을 근거로 삼은 것이기에 일본 정부의 이런 오판에 의한 계엄령선포가 적법한 것이었느냐의 문제
- ▶ 일본 정부가 '風說(유언비어,거짓뉴스)'을 사실화하여 '계엄령 발포'를 한 행정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2)]
- ▶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에 관한 '風說(유언비어,거짓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음에도

2) 大日本帝國憲法(메이지 22-1889년 2월 11일 공포, 메이지 23-1890년 11월 29일 시행) 제14조에 의하면, 천황은 계엄(戒嚴)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며칠사이 일본 민중들이 잔혹한 민족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된 군중심리에 대한 문제

- ▶ 1923년에 일어난 '関東학살사건'과 그 사건을 조사하고 추모해온 100년간의 역사는 학살사건 못지 않게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그 속에 사죄가 있고, 반성이 있고, 국가책임촉구가 있으며, 그 속에 화해와 상생을 향한 연대가 있기 때문이다.
- ▶ 일본정부의 탄압 속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 및 일본우익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표현한 많은 문학작품(시, 소설, 동화, 잡문)과 예술작품(연극, 영화, 노래),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다듬어지지 않은 원자료(회의록,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 '차별과 배제의 일상화'는 과거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팬더믹 속에서가 극단적인 민족제노사이드가 발생하고 있기에 '차별과 배제의 일상화'에 대한 문제를 '간토학살사건'의 연관하여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関東학살사건 100년'을 준비하며 '関東학살사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역사학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인문학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며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Ⅳ. 나오며

1923간토학살사건 직후 조선에서는 〈재동경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결성하고 위문과 함께 조사활동을 하였다. 위문반은 1923년 10월 초에 결성되어 1923년 12월 25일까지 활동하였다. 일본 당국의 사건 은폐와 경찰의 감시, 그리고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지역주민들의 비협조와 적극적 침묵으로 많은 저해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1923년 12월 25일「在京朝鮮人狀況」이라는 일종의 성명서와 그리고 그 내용이 실린 1924년 『동아일보』1월 6일자 「이재조선인위문반의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표했다.

1. 진재당시의 조선인범죄사실은 전혀 없다.
1. 유언비어의 출처는 일본정부 당국이다.
1. 유언비어의 동기는 일본인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여 鮮日무산계급의 분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이다.
1. 유언비어의 전파자 역시 일본정부당국이다.[3)]

이처럼 대일항쟁기의 조선인들은 나라를 잃었어도, 같은 동포들이 당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책임을 촉구하였는데,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 학살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추도 메시지조차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위안부문제나 강제동원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와 간토학살문제에 대한 역사청산문제에 이렇듯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비겁한 책임전가와 후안무치한 역사부정, 그리고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과는 달리 1923년 이후 100년 가까이 추도와 조사와 연구를 해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집대성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적 퍼포먼스로 추모의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심포지움을 기획하고자 한다.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과 같은 민간법정을 해보자는 프로젝트를 내오는 이들도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화를 향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간토학살 100년의 국가책임을 지금처럼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바라기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학살피해 사실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위령하고, 또한 국가의 이름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준엄하게 묻고, 전 세계의 제노사이드사에 올바르게 기술되어 다시는 이러한 민족 제노사이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을 천명하는 2023년 9월이 되기를 희망한다.

3) 김강산, “관동대학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 역사학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신학철 그림. 간토대지진

일본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교육

서 종 진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역사교과서의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 내용 검토

- 2020년 검정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

서 종 진(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올 해 3월 24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정 신청 교과서는 총 9종이었고 2종이 불합격(지유샤, 레이와)되었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2018년에 개정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거하여 집필되고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보수세력이 영향력을 증대시켜서 기존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이 자학적이고 반일적이라고 공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크게 반영시킨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정치·재계·언론계 등 다방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점차 높여왔다. 예를 들면 패전 직후에 폐지된 기원절을 '건국기념일'로 부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70년대에는 원호 법제화를 성립시켰으며, 1999년에는 국기·국가 법안을 성립시키는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세력들은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지원하여 교과서를 제작하여 자국중심적인 역사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후소샤 교과서가 새역모가 제작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이다.

〈표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출판사별 검정 현황

연도	검정 통과 교과서 종수(출판사)
2005년	8종(후소샤, 도쿄서적, 일본서적신사, 오사카서적,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교육출판, 청수서원)
2011년	7종(지유샤, 이쿠호샤, 도쿄서적,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교육출판, 청수서원)
2015년	8종(지유샤, 이쿠호샤, 도쿄서적,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교육출판, 청수서원)
2020년	7종(마나비샤, 이쿠호샤, 도쿄서적,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교육출판, 야마카와출판)

이번 검정은 2018년에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검정 교과서와 비교하여 기술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근대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경험한 지역과 국가에서는 과거사를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집단적인 역사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역사 교육과 교과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이 보고에서는 지난 3월에 검정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가운데에서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근대 한국관련 기술 가운데 특히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동대지진은 일본군 '위안부'와 '난징대학살' 사건과 같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학사관'의 일례로서 일본 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관련 기술의 변화를 통해 최근 일본의 역사인식의 한 단면과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현황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2020년도 교과서 검정 개관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교과서 분량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비교하면 평균 7.6%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 검정교과서의 1.5배에 해당한다. 교과서 분량의 증가는 당연히 심사 과정에서 내용 수정을 의미하는 검정의견 수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이번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용도서검정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제시된 검정의견은 총

4775건으로 이전 보다 121건이 증가하였다.

검정 결과 역사 교과서의 경우, 새역모가 제작한 지유샤(自由社) 교과서가 불합격되었다. 총 314쪽의 교과서에 검정의견이 총 405건이 제시되어 '결함'부분이 페이지 당 1.2배 이상인 경우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2016년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교과 교과서의 간판격의 출판사인 야마카와(山川)출판사가 이번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여 검정 합격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세계사와 일본사 교과서의 60~70% 점유율을 자랑하는 야마카와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발간으로 향후 중학교 역사교과서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에 야마카와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지만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부활시켜서 기술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마나비샤의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관련 기술이 간접적으로 기술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회과 교과서 역사(7), 지리(4), 공민(6) 등 총 17개 전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거나 일본이 '편입'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기술 현황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기술하게 하고 영토 교육을 강화하게 한 현 아베정권의 교육정책의 결과물이다.

문부과학성은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의 목표를 교과서에 충실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교과서 검정심의회의의 보고에 의거하여 검정제도를 개정하였다. 각 교과 공통의 '기본적 조건'에도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의 교육목표와 학습지도요령의 총칙에 제시된 교육방침과 각 교과의 목표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하였는데, 특히 검정기준은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기준 개정・고시(2014.1.17.)는 이후 초등학교 사회과, 중・고등학교 역사・지리・공민 교과서 검정에 적용되고 있다.

1) 특정 사항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할 것. 2) 근현대 역사적 사상(事象) 가운데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할 경우에는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아동 또는 생도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3) 각의 결정 그 외의 방법으로 표명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한 기술이 되어 있을 것.

이들 교과서 관련 개정된 규정을 검정 과정에서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 발 나아가서 문부과학성이 직접 검정 의견을 제시하여 기술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 2)를 적용하여 이 규정에 의거한 검정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 내용을 수정하게 한 것이다. 통설이라는 것은 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검정에서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에 대해서 검정의견이 제신된 것은 마나비샤의 구두점 단순 오기 사례가 하나 있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검정의견이 줄어든 것은 그 동안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몇 차례 검정을 거치면서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교과서 기술에 이미 정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아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사례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어 그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표 2〉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 검정 사례

	야마카와 일본사B(2017)	실교출판사 일본사A(2016년)
신청	"조선인 수천 명, 중국인 약 200명이 학살당했다."	"군대 경찰과 자경단이 6000명 이상의 조선인과 약 700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다. "
검정의견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수정문	"많은 조선인·중국인이 학살당했다."	"군대 경찰과 자경단이 엄청난 수(注)의 조선인과 약 700명의 중국인을 학살하였다." (注) 학살당한 명수는 재일본관동지방이재 조선동포위문반 조사 약 6600명, 요시노 사쿠조 보고서 약 2600명, 사법성 조사 약 230명 등이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학살을 포함한 사망자 수를 약 830명이라 한다. 이처럼 학살당한 명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 밑줄 부분은 검정의견으로 인해 수정된 부분임.

위와 같이 검정 과정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검정 의견이 제시된 결과, 기술 내용은 모호하게 되거나 '명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검정을 통과하였다. 교육기본법을 필두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 그리고 교과용도서검정기준이 새롭게 개정됨으로써 교과서를 제작하는 집필자와 출판사는 검정 합격을 위해서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014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1월에 개정·고시한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1.17)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1.28) 개정으로 대변되는 문부과학성이 추진해 온 일련의 '교과서 제도 개혁'이 연이어 발표되어 정착된 결과 이번 검정 교과서 기술 내용은 예상 보다 변화는 적었다고 생각된다.

3. 관동대지진 관련 기술 내용 비교

이번에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구판(2015)	신판(2020)
도쿄서적	**〈역사에 액세스〉 관동대진재** 1923년 9월 1일, 동경, 요코하마(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덮쳐서, 이들 지역은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는 전괴 약 11만호, 전소 약 21만호, 사망자·행방불명자 약 10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우물에 독을 넣었다.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확산되어, 많은 조선인, 중국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진재는 도시 개조의 계기도 되어, 부흥 가운데 동경과 요코하마는 근대적인 도시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211) 〈도판〉 관동대진재 직후의 동경(211)	**〈역사에 액세스〉 관동대진재** 1923년 9월 1일, 동경, 요코하마(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덮쳐서, 이들 지역은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는 전괴 약 11만호, 전소 약 21만호, 사망자·행방불명자 약 10만 5천명에 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우물에 독을 넣었다.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확산되어, 많은 조선인, 중국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진재는 도시 개조의 계기도 되어, 부흥 가운데 동경과 요코하마는 근대적인 도시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221) 〈도판〉 관동대진재 직후의 동경(221)

	구판(2015)	신판(2020)
교육출판	**〈역사의 창〉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을 대지진이 덮쳐서, 동경과 요코하마를 비롯하여 관동 일원은 지진과 화재에 의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을 입은 가옥은 약 37만 호,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등의 소문이 확산되어,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경찰·군대에 의해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중에서도 살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부흥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 증가하는 등 수도·동경의 경관은 크게 변해갔습니다.(209) 〈도판〉 관동대지진 직후의 동경 히비야	**〈역사의 창〉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을 대지진이 덮쳐서, 동경과 요코하마를 비롯하여 관동 일원은 지진과 화재에 의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을 입은 가옥은 약 37만 호,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등의 소문이 확산되어,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경찰·군대에 의해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중에서도 살해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 부흥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 증가하는 등 수도·동경의 경관은 크게 변해갔습니다.(225) 〈도판〉 관동대지진 직후의 동경 히비야
일본문교출판	**〈근대사 플러스 a〉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여, 동경과 요코하마는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재자는 약 340만 명,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던져 넣고 있다는 소문이 주민과 경찰에 의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군대· 경찰에 의해 많은 조선인 외에, 사회주의자와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갑작스런 피재에 의한 정신적 혼란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진재 부흥사업에 의해 동경과 요코하마는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되고 마을의 경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219)	**〈근대사 플러스 a〉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여, 동경과 요코하마는 괴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재자는 약 340만 명,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던져 넣고 있다는 소문이 주민과 경찰에 의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군대· 경찰에 의해 많은 조선인 외에, 사회주의자와 중국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갑작스런 피재에 의한 정신적 혼란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진재 부흥사업에 의해 동경과 요코하마는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정비되고 마을의 경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235)
이쿠호샤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동경·요코하마라는 인구 밀집지를 직격하였습니다.(관동대진재) 이 지진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 소실 가옥 약 45만호라는 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끊어진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 등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진재 후의 동경은 고토 신페이 등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219) 〈도판〉 관동대진재(1923년 9월)(219)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동경·요코하마라는 인구 밀집지를 직격하였습니다(관동대진재). 이 지진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10만 수천 명, 소실 가옥 약 45만호라는 큰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끊어진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만든 자경단 등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진재 후의 동경은 고토 신페이 등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229) 〈도판〉 관동대진재(1923년 9월)(229)

	구판(2015)	신판(2020)
제국서원	1923년 9월 1일, 가나가와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동경과 요코하마를 직격했다. 각 가정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큰 불이 나서, 사망자·행방불명자 10만 5천명 이상, 이재민 340만 명 이상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과 공장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피해를 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에서 대진재 후에 부흥 계획이 세워져서 도로를 넓히고 피난용 공원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진재 직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서 자경단을 만든 주민에 의해서 조선과 중국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사회주의자가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211) - 〈도판〉 관동대지재로 폐허가 된 아사쿠사(211)	대도시를 엄습한 관동대진재 1923년 9월 1일, 가나가와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동경과 요코하마를 직격했다. 각 가정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큰 불이 나서, 사망자·행방불명자 10만 5천명 이상, 이재민 340만 명 이상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의 약 90%는 화재가 원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공장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피해를 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에서 대진재 후에 고토 신페이 등을 중심으로 부흥 계획이 세워져서 도로를 넓히고 피난용 공원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진재 직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서 자경단을 만든 주민에 의해서 조선, 중국 사람들과 사회주의자가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227) - 〈도판〉 관동대지재로 폐허가 된 아사쿠사(227) - 〈도판〉 큰 도로의 건설(227)
야마카와 출판		1923년(다이쇼12)년 9월 1일, 마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동경·요코하마(가나가와현) 등의 대부분이 피해를 받아 괴멸적인 상황에 떨어졌다(관동대진재).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이르고, 피해 총액은 60억 엔이 넘었다. 피재지에서는 군대를 중심으로 치안유지가 실시되었는데, 진재의 대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소문이 나오고, 특히 조선과 중국 사람들에 대한 폭행과 살상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별히 조선 사람들이 살상된 배경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조선 사람들에 의한 저항 운동에 대한 공포와, 민족적인 차별의식이 있었다. 군대와 경찰, 일반 민중으로 조직된 자경단도 가해자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았다. 또한 군 내부에서는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어 간 것도 있어서, 진재의 혼란 속에서 사회주의자가 살해 탄압되는 사건도 일어났다.(227) 〈도판〉 관동대지진대의 피해(227)

	구판(2015)	신판(2020)
마나비샤	1923년 9월 1일, 마그니튜드 7.8의 대지진이 관동 지방을 덮쳤다. 건물이 무너지고 강풍을 일으키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0만 5000명에 달했다. 동경시와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수의 가옥이 피해를 입고 많은 이재민이 나왔다. 지진 후, '조선인이 공격해 온다' 등의 소문이 확산되어, 군대·경찰과 주민이 만든 자경단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수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 주의자도 살해되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일하러 온 조인승(당시 21세)은 피난한 (구) 요쓰기바시(동경도) 근처에서 소방 대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서에 연행되는 도중의 다리 위에는 많은 시체가 있었다. 경찰서에서 그는 도망치려한 조선인 8명이 찔려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 60년 후, 조인승은 다리가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여 말하고 있다.(후략) (217) 〈각주〉 학살당한 조선인의 인수 약 230명(당시의 정부조사)과 약 2610명(요시노 사쿠조 조사), 약 6650명(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에 의한 조사) 등이 있다. 학살당한 인명수는 명확하지 않다. 〈도판〉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1일, 마그니튜드 7.8의 대지진이 관동 지방을 덮쳤다. 건물이 무너지고 강풍을 일으키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행방불명자는 10만 5000명에 달했다. 동경시와 요코하마시에서는 다수의 가옥이 피해를 입고 많은 이재민이 나왔다. 지진 후, '조선인이 공격해 온다' 등의 소문이 확산되어, 군대·경찰과 주민이 만든 자경단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수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 주의자도 살해되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일하러 온 조인승(당시 21세)은 피난한 (구) 요쓰기바시(동경도) 근처에서 소방 대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서에 연행되는 도중의 다리 위에는 많은 시체가 있었다. 경찰서에서 그는 도망치려한 조선인 8명이 찔려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 60년 후, 조인승은 다리가 있었던 장소를 방문하여 말하고 있다.(후략) (207) 〈각주〉 학살당한 조선인의 인수 약 230명(당시의 정부조사)과 약 2610명(요시노 사쿠조 조사), 약 6650명(일본에 있었던 조선인들에 의한 조사) 등이 있다. 학살당한 인명수는 명확하지 않다. 〈도판〉 관동대지진
지유샤*	1923(다이쇼12)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민가, 중요 건축물, 문화시설 등 다수가 소실되었고 사망자 · 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을 넘었다(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의 근대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얻은 교훈도 많아 내진설계의 기준작성과 도시방재 연구가 시작되었다. 간선도로망과 도시공원녹지 정비에 힘썼고,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공공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221)	1923(다이쇼12)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민가와, 중요 건축물, 문화시설 등이 소실되었고, 사망자는 10만 5천명에 달했다(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근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얻은 교훈도 많아서 내진설계와 도시방재 연구가 시작되었다. (221) 〈도판〉 도심의 진재현황

* 지유샤 교과서는 검정에 통과하지 못하였지만 참고로 게재.

관동대지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현행본과 합격본을 비교하면서 그 변화와 특징,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서는 본문과 칼럼, 박스, 각주 등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연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첫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 수에 대한 기술이다.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총 수는 학살로 인한 희생자의 수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총 수는 약 10만에서 10만 5천명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기술되어 있었던 14만 명이라는 기술은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둘째,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사건과 관련된 기술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인 약 6600명, 중국인 약 200명, 일본인 약 60명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있다. 희생자의 압도적 다수가 조선인이었다. 당시 학살사건이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문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자의 수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는 교과서는 마나비샤가 유일하다. 그것도 위에서 언급한 검정기준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희생자를 평면적으로 나열한 교과서도 있고, 학살에 대해 기술하면서 막연하게 '많은'이나 '다수'라고 기술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쿠호샤의 기술처럼 이러한 수식어조차도 붙이지 않는 기술도 있다. (참고 자료로 게재한 지유샤는 학살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다.)

셋째, 학살의 주체에 대한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학살에 관헌이 관여하였다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학살의 주체가 관헌과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마나비샤 정도이고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는 도쿄서적과 야마카와출판사이다.

넷째,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상사건'이나 '살해'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마나비샤가 유일하다.

다섯째, 당시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된 '유언비어'에 대한 기술이다. 당시 유언비어는 관헌이 치안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산을 방조했다는 연구가 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대부분 언급하고 있으나 유언비어의 주체가 관헌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또 새역모 계열의 교과서는 유언비어에 대한 기술 자체가 없다.

여섯째, 관동대지진을 서술한 부분에 사용된 도판에 대해 살펴보자. 교과서에 사용된 도판은 문자화된 내용을 보완하는 학습 자료이다. 관동대지진에 대한 서술 부분의 도판도 본문과 각주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사 정보 이상으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 일본 교과서의 관동대지진관련 도판

		
아사쿠사 십이층	자경단	고토 신페이

먼저 자경단의 도판이 사라진 대신 새롭게 추가된 도판이 고토 신페이 도쿄 도지사의 사진인데 이는 도쿄 복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학살사건을 연상시키는 도판은 마나비샤가 유일하다. 대부분 파괴된 시가지와 고토 신페이 도판이 남게 되어 당시 학살사건의 실상을 알리는 자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문부과학성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된 일련의 교육 '재생' 정책으로 교과서 출판사 측이 검정 합격을 위한 집필을 하게 되고 교과서 기술 내용이 획일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과서에 학계 연구 성과 보다는 정부 견해를 우선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이유로 애매한

기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관동대지진과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방식에는 교과서 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동대지진에 대한 기술에서 '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학살된 희생자 수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다수' '많은' '수 천' '약 6천' 등 다양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학살'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힌 교과서는 소수에 불과하고, 도판을 보면 폐허가 된 시가지 도판이 대부분이며 도지사의 사진이 등장한 대신 자경단의 사진은 사라져버렸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인'이 제국 일본에 언제 어떤 연유로 거주하게 되었는지, 과거와 현재의 '자이니치'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관동대지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피지배자 신분으로 이국 땅에 이주하여 생활하던 조선인들이 무차별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상황에 있었던 한일관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현재 '재일 코리언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민족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직시하는 역사 교과서와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